

김지사, 사전대비 단계 근무 격상 특별지시

집중호우 긴급 대처상황 보고회...철저 대비 당부 노후 저수지·산사태 우려지역 등 집중 점검 주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11일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처상황보고회를 열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예고된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특별지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도청 전 실·국장이 참여했으며,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와 관련, 반지하주택 등 침수우려 지역과 유동인구 밀집구역 내 맨홀, 산사태 우려지역, 농업용 저수지 등에 대한 대책을 중점 점검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내린 기록적인 호우로 이날 오전 1시 기준 사망자 11명, 실종 8명, 부상 16명의 피해가 집계됐다. 공공시설 피해는 선로 침수 17건, 제방유실 9건 등으로 확인됐다. 주택과 상가 3천755동이 물에 잠기고, 농작물 305ha 침수, 가축 2만553마리 폐사 등 사유시설 피해도 컸다. 기상청은 11일 밤부터 12일 오전 사이 전남 전역에 20~70mm가 비가 내리고 영광, 장성 등 전남 북부 일부 지역은 100mm 이상의 큰 강우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16일부터 17일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도내 전역에 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지사는 "현재 비상근무 기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평시 단계'로 운영하고 있지만 도와 22개 시·군 모두 '사전대비 단계'로 격상해 적극 대비하고 피해를 기다리지 말고 예방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지사는 "완도, 신안 등 일부 시·군이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이상기온에 따른 집중호우로 가뭄 지역도 순식간에 호우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도 각 실·국은 모든 재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재난 예방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각종 시설 점검에 나서 취약

지역을 철저히 예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와 태풍 예보 시 ▲예경보시설을 활용한 기상상황 수시 전파 ▲산사태, 침수 우려 저지대 등 주민 대피 ▲이재민 보호시설 전력·구호물자 확보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방파제, 도심지역 맨홀 등 피해 우려 지역 접근을 통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전남도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로 설정하고 상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김영록 지사 긴급지시에 따라 22개 시·군 재난부서장과 협업체 반지하주택 등 침수우려 저지대, 도심지 맨홀, 산사태 우려지역과 취약 저수지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김재정기자

전남 인재 한마당 '성황'

4년간 5천588명 육성...각분야 두각

전남도가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해 펼친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2022년 전남도 인재 한마당'이 11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 서동욱 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장학기금 고액 기탁자 등 내외 귀빈과 새천년 으뜸인재,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도 대표 유튜브 채널 ' 으뜸전남튜브'에서 생중계됐다. 이번 행사는 새천년인재육성프로젝트 4년 간의 성과를 돌아보면서 올해 신규 선발된 해외 유학생, 으뜸인재, 예능영재, 노벨캠프 등 7개 분야 539명의 인재를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특히 새천년 인재육성프로젝트로 선발된 인재들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사업별 대표 10명이 도지사로부터 '전남도 인재증서'를 받았다. 2019년 시작한 인재육성프로젝트는 2020



11일 오후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2022 전남도 인재 한마당'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미래를 책임질 지역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년 1천308명, 2021년 2천78명 등 지난 7월까지 총 5천588명의 인재를 발굴했다. 김영록 지사는 "많은 학생들이 프로

젝트를 통해 전남의 인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지역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첨단

산업과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 수도 전남'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광주시, 민선 8기 첫 추경 7천362억 편성

코로나19·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경제·민생안정 중점

민선 8기 광주시가 제1회 추경예산 7천362억원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7조94억원보다 10.5% 증가한 7조7천457억원 규모다. 회계 별로 일반회계가 6천629억원(11.7%) 증액된 6조3천3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33억원(5.5%) 증액된 1조4천126억원이다. 세입 중 지방세는 주택 거래량 감소에 따른 취득세 720억원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주유세 295억원이 감소했으며 국세 세수 호조 등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1천202억원 증가했다. 의존 재원인 국고보조금은 2천491억원, 지방교부세는 2천41억원 증액됐다. 이번 추경예산은 고유가·고물가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방역 보강,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없는 추

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먼저 시는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광주상생카드 10% 할인 혜택 지원 489억원, 소상공인특례보증 자금·이자지원 36억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했다. 코로나19 방역 보강과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1·2회 추경에 대응해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508억원, 생활지원비 지원 564억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360억원을 편성했다. 시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시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확정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확정에 신속 대응하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정기자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 치른다

이병훈 국회의원 vs 최희용 전 참여자치21 대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가 현역의원과 평당원 간 경선으로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1일 "광주시당을 이끌 차기 시장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를 접수한 결과, 이병훈 현 광주동남을 국회의원과 최희용 전 참여자치 21 대표가 등록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향후 후보자 설명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기호 추천 ▲선거운동 방식 확정 등 시장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시장위원장 경선은 전국대의원 투표 50%, 권리당원 투표 결과 50%를 합산한다.

권리당원 투표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투표 1일, 강제적 ARS 투표 1일, 자발적 ARS 투표 1일간으로 진행된다. 전국대의원 투표는 2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실시되는 광주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현장 투표로 실시된다. 최종 투표 결과는 이날 당일 현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호 광주시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두 후보가 접수하면서 경선이 이뤄지는 만큼 선거관리 지침에 따라 경선을 공정하게 진행해 향후 2년간 시장을 운영할 책임자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정기자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구역 확대해야

광주전남연구원, 灣단위 수산자원 관리·관광 활성화 제안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과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산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보성·순천갯벌의 참모닥과 새모닥, 고창갯벌의 바지락과 동족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를 포함한 철새 서식지가 여수 등 인근 갯벌로 확산되고 있어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1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세계유산 '한국의 갯

벌' 유산구역 확대 필요성과 추진전략'을 발간해 갯벌보전정책의 전환을 통한 세계유산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은 지난해 세계유산에 등재된 보성·순천갯벌, 신안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의 총칭으로, 유네스코에서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종 서식지'라는 OUV를 인정받으면서 유산구역 확대 권고에 따른 이행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백은정기자

'풍력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 요청

박창환 부지사, 국회 찾아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건의

전남도는 11일 "박창환 정무부지사가 국회를 찾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에게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부지사는 도 에너지산업국장과 함께 국회 산자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간사)과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송기현 의원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은 개별 입지 발굴에 따른 주민 협의의 난항, 여러 부처에 걸친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장기간 등으로 사업을 제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가 주도의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선 인허가 원스톱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익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스톱 기구 신설, 국가 주도 계획입지,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허가 절차에 5~6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이 2년 10개월로 획

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 대규모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해상풍력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일괄 지원하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강력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해상풍력을 통해 조선·기계 등 기존 지역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대전환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전남의 확실한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대광새마을금고

더 멀리,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대광새마을금고 이사장 안근원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